

광주 서구, 전국 최초 전 지역 골목형상점가 지정

‘대한민국 골목경제 1번지’ 선포 18개동 골목형상점가 100% 지정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1만1천여곳 구청장 골목현장 집무실 등 운영

광주광역시 서구가 전국 최초로 관내 전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는 등 ‘광주형 골목경제’를 통한 지역상권 회복과 공동체 상생경제 실현에 본격 나섰다.

30일 광주광역시와 서구에 따르면 서구는 이날 오전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에서 ‘착한도시 서구, 대한민국 골목경제 1

번지 선포식’을 개최하고 18개 동 119개 골목형상점가 100% 지정 완료를 공식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이강 서구청장을 비롯해 119명의 상인회장단, 박종찬 광주전남중소벤처기업청장, 박진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본부장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선포식은 미디어대북 공연을 시작으로 서구 골목상권 변화와 상인들의 이야기를 담은 홍보영상, ‘골목경제119 프로젝트’ 추진경과를 미니 뮤지컬 형식으로 풀어낸 극단 각지의 공연이 펼쳐졌다. 이어 119명의 상인회장들과 함께한 퍼포먼스, 주

요 내빈과 상인 대표들의 ‘착한도시 서구, 대한민국 골목경제 1번지’ 선포 점등식을 통해 지역경제의 새로운 출발을 대내외에 알렸다.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골목경제 119 프로젝트’를 통해 약 100일 동안 추진됐다. 서구는 지난 3월부터 상권 실태조사, 상인 의견수렴, 구체적인 상권 범위 조정 등 실무 절차를 거쳐 모든 동의 상권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함으로써 민·관 협력의 상생모델을 완성했다.

이번 지정으로 서구 전역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중심으로 사용처가 제한적이었으나 서구는 음식점, 병원, 카페, 주유소, 미용실, 학원 등 생활 업종 전반으로 사용 가능 범위를 넓혔다. 서구 관내 1만7000여 개 점포 중 가맹 제한 업종을 제외한 1만1400여 점포가 대상이다.

골목형상점가 확대 지정으로 소비자들

은 최대 20%의 할인 혜택을 누리고 있으며 상인들도 최근 10~20% 매출 증대 효과를 체감하고 있다.

한 상인회장은 “온누리상품권이 우리 골목에서도 사용 가능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손님이 눈에 띄게 늘었다”며 “골목상권이 오랜만에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 밝혔다.

김이강 서구청장은 인사말에서 “서구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은 단순한 행정 성과가 아니라 ‘골목이 살아야 민생이 산다’는 절박한 마음, ‘골목이 곧 공동체의 뿌리’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시작한 일이었다고 불과 100일만에 현실이 됐다”며 “서구에서 피어난 희망이 대한민국 민생경제의 새로운 모델이 되고 새로운 미래가 될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더 힘차게 뛰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영상축사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께서 취임 직후 첫 업무지시가 바로 골목경제 살리

는 민생경제 회복이었다”며 “이런 국가적 과제를 빠르게 실행했고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고 있는 광주 서구의 모델이 전국 자치구의 본보기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서구는 이번 선포식을 시작으로 골목형상점가 중심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후속 조치에 본격 착수한다. 7월부터 매주 주요 골목형상점가를 직접 찾아 주민과 상인의 목소리를 듣고 구정 현안을 챙기는 ‘구청장 골목현장 집무실’을 운영하고, 구청장실에 ‘골목경제상황실’을 설치해 골목상권 현황을 실시간 파악하고 데이터 기반의 정책 결정과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서구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는 상인에게 제도적 보호막, 소비자에게는 혜택을 제공하는 생활경제 인프라”라며 “후속 정책을 촘촘히 설계해 골목경제가 지역공동체 회복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상아 기자



신수정 광주광역시의회 의장이 30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33회 임시회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시의회 ‘중심상업지역 용적률 상향 조례’ 부결

강 시장 ‘숙의 후 다음 의회서 찬성’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폐기 수순

광주광역시의회가 강기정 광주시장의 재의 요구에 따라 다시 표결한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 상향’ 조례안을 30일 부결시켰다.

이날 제33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진행된 재표결은 무기명 방식으로 이뤄졌으며 전체 재석 의원 23명 중 찬성 13명·반대 10명으로 나타났다.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16명)을 충족하지 못해 조례안은 최종 폐기됐다.

해당 조례는 중장로·금남로·상무·첨단 등 광주의 주요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시설 용적률 상향을 현행 400%에서 540%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시의회는 △도심 공동화 해소 △주거 수요 대응 △건설 경기 회복 등을 이유로 개정을 추진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위락 시설과의 혼재로 인한 정주 여건 악화, 교통 혼잡, 교육 환경 저해, 미분양 심화 등을 우려해 재의를 요청했다.

강 시장은 이날 표결에 앞서 “이번 조례는 공공성과 시민 삶의 질을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오늘 부결을 통해 조례를 폐기해 달라. 다른 정책 수단이 없다면 민선 9기 의회에서 새 조례가 올라올 경우 찬성하겠다”고 요청했다.

부결 직후 광주시는 입장문을 내고 “도시계획의 공공성과 체계성을 지키려는 우리 시의 목소리를 시의회가 수용한 것”이라며 “시와 시의회, 시민사회, 전문가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광주에 맞는 새로운 방안을 생산적으로 모색해 나가겠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날 시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나 위원 선임은 다음 회기로 미뤄졌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하는 단체에 예산을 지원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안은 의원 간 협의 끝에 본회의 상정을 보류해 자동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

정성현 기자

김영록 도지사, 폭염 대응 체계 전면 점검

폭염에 위기단계 ‘심각’ 격상 12개 부서 취약계층 집중관리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폭염 대응 체계를 전면 점검하고, 시군과 협력해 노인 생명과 안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지시했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지역에는 지난 27일 첫 폭염특보가 발효된 이후 22개 모든 시군에 폭염특보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남지역 운영질환자는 24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전남도는 폭염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즉시 가동했다. 상황관리, 의료·방역 등 총 5개 반 12개 부서를 중심으로 시군과 협력해 예방 대책을 강화하고, 각종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특히 경로당 에어컨 가동에 필요한 냉방비 선제적 지원과 함께 축사 지붕 열차단제 시공과 양식장 액화산소 공급기 설치에 필요한 사업비가 적기에 지원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오지현 기자

2025 대중음악콘서트

POP MUSIC CONCERT

속행
김양
김산옥
하태하
하유비

7월 / 5일 (토)

14:00 ~ 15:30

빛고을시민문화관 공연장

공연문의 . 062.670.7941
입 장 료 . 50,000원

<http://bitculture.gjcf.or.kr>

※ 상기 공연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